

이슈브리프

# ISSUE BRIEF

발행일 2017년 12월 18일

| 금주의 이슈 |

I. 美 법인세율 대폭 인하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 1

II. 중국경제 新위기설의 확산 및 정책 제언 / 8

III. 네이버 '요약봇'의 기사 왜곡 사례와 대응 방안 / 15

## 금주의 이슈

◆ 금주(12월 셋째주)는 경제·지역경제·사회 분야에 관한 3편의 이슈를 다루었음. 제1편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율 대폭 인하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중국정부의 경제통제능력 제약과 관련된 현상을 진단해 보았음. 끝으로 제3편에서는 네이버 뉴스 ‘요약봇’의 기사 왜곡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음

◆ 제1편 : 美 법인세율 대폭 인하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 미국의 법인세율 대폭 인하 및 그에 따른 글로벌 법인세 인하 도미노 현상과는 달리 文정부는 오히려 ‘나홀로 법인세율 인상’을 밀어붙여 2018세법에 반영시킴. 향후 법인세율 인하와 더불어 법인세 누진구조를 단순화·단일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제2편 : 중국경제 新위기설의 확산 및 정책 제언

- 최근 중국경제 新위기설은 중국당국의 주식외환시장 개입이 실패하면서 정부의 경제통제 능력 한계를 보임에 따라 세계적으로 확산 중임. 우리는 한국에 만연된 중국경제 낙관 분위기를 가다듬고 특히 중국發 경제위기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임

◆ 제3편 : 네이버 뉴스 ‘요약봇’의 기사 왜곡 사례와 개선 방안

- 네이버(일일 방문자 수 2,500만명)에서 11월 27일부터 뉴스를 자동으로 요약(AI)하는 ‘요약봇’ 서비스를 시작함. 네이버는 신문법 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뉴스배열에 대한 권한을 지닐 뿐, 뉴스 요약에 대한 권한은 부여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2017. 12. 18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대 식

# I. 美 법인세율 대폭 인하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작성: 이종인 경제정책실장 ☎ 02-6288-0536

미국의 법인세율 대폭 인하 및 그에 따른 글로벌 법인세 인하 도미노 현상과는 달리 文정부는 오히려 ‘나홀로 법인세율 인상’을 밀어붙여 2018세법에 반영시킴. 향후 증세 부작용이 큰 법인세율 인하와 더불어 법인세 누진구조를 단순화·단일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1.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추진 경위

□ 현행 35%에서 20~21% 수준으로 대폭 인하 확정적

○ 美 트럼프대통령 법인세 최고세율 35%→15% 인하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제시(2016.9.27.)

- 감세에 따른 조세수입 격감을 우려한 공화당 내 반발로 20%로 인하 폭을 완화하여 제시

○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 감세 이후 30년만의 최고 수준의 감세(안)임<sup>1)</sup>

1) 이른바 ‘레이저노믹스’로 불리는 1980년대 초 레이건(1981~1989) 정부의 감세정책을 말함.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70%→28%)를 포함하여 법인세율을 48%에서 34%로 대폭 인하함. 당시의 감세정책의 단기적 효과는 기대 이하였지만 장기적으로 1990년대 미국 경제호황의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임.

□ 법인세율 인하 등의 세제개편안이 美 상·하 양원을 통과

○ 20%로의 법인세율 감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하원(11.16)에 이어 상원에서도 12월 2일 통과

- 현재 하원 및 상원 각각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세부 내용, 시행시점 등의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단일안이 대통령에게 곧 제출될 예정

□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에서 21%로 합의, 내년부터의 시행이 거의 확정적

○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원안(20%)보다 1%p 높은 수준에서 합의 되었으며, 다음 주 중 상·하원 전체회의에 동 세제개편 합의안이 상정·통과 예상

-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내년부터 시행 예상

• 다만, 표결과정에서 일부 공화당 의견의 표 이탈 등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않은 상태

## 2. 美 법인세율 인하의 파급 효과

□ 자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기대감

○ 법인세율 대폭 인하뿐 아니라 해외 잉여금에 대한 세율인하 등 트럼프

행정부의 친시장적 세제개편으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자금 유입, 인수합병(M&A) 증가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가속화

○ 美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제조업 실적개선 및 리쇼어링 촉진, 성장 동력 확대 등 기대

- 개선될 기업이익을 투자·생산확대, 고용증가, 임금인상, 부채축소 등에 사용함으로써 성장 촉진 기대

#### □ 글로벌 법인세 인하 도미노 현상 가속화 촉발

○ 최근 세계 각국은 투자 유치·유치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자국의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임

- OECD 35개 회원국 평균은 2000년까지 30.2% 수준이었으나, 2008년 23.9%로, 지난해에는 22.5%로 인하됨으로써 현재의 한국보다 낮은 수준

○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진과 맞물려 아시아·유럽 국가들도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

- 일본은 2008년까지 30%였으나 지난해 23.4%까지 인하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실질 세율 부담을 최대 20%까지 낮출 방침

- 16.5% 수준의 홍콩에서도 일정규모 이하 법인에 대해 8.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 중

- 호주 역시현재 30% 수준이지만, 국내적으로 OECD평균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 대두
-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미국의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가 자국의 경쟁력에 미칠 파장에 촉각

### 3. 거꾸로 가는 文정부의 법인세 정책

#### □ 2018세법개정(12.5)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확정

-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 기존 22%보다 3%p 높아진 25%의 명목 최고세율 적용(13.6% 인상률)

- 해당 대기업집단 주요 계열사 등 77개 기업으로부터 2.3조원 추가 증세

#### □ 글로벌 트렌드에 거슬러 법인세를 인상한 유일한 국가

- 금융위기 이후 OECD 17개국<sup>2)</sup>이 법인세 인하<sup>2)</sup>

- 미국(35%→20%)을 포함한 영국(20%→18%), 프랑스(33.3%→28%), 노르웨이(25%→23%), 벨기에(33.99%→25%), 룩셈부르크(29%→22%), 아일랜드(12.5%→6.25%) 등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

2) OECD 회원국중 법인세를 인상한 경우는 그리스, 멕시코, 헝가리, 칠레,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등 6개국임.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재정위기를 겪었으며, 단기적 위기타개를 위한 방편으로 법인세를 인상했으나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명..

## □ 복잡한 4단계 법인세 누진구조는 갈라파고스의 세제

○ 文정부가 추진하여 성사시킨 법인세 4단계 누진구조는 단순·단일구조가 일반적인 세계적 경향에 역행

- 포르투갈(5단계)과 벨기에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유일

- 독일, 캐나다, 영국 등 OECD 35개국 중 26개국이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윤크기와 관계없는 단일세율 체계

• 일본, 호주, 헝가리, 네덜란드 등 4개국은 2단계이며, 프랑스와 벨기에가 3단계 구조를 하고 있음

• 미국도 형식상 8단계로 복잡해보이지만, 단일구간 확대로 거의 대부분 단일세율 효과<sup>3)</sup>

○ 누진과세는 주주·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부작용 발생 가능

- 법인세 인상은 근로자 임금, 주주 배당 감소,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한 소비자 전가가 일반적

• 법인세 변동의 영향은 주주 60%, 근로자 20%, 자본가 20% 비율로 귀착 (美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

---

3) 최고세율 적용구간인 8단계는 소득 1,833만불(약 205억원) 이상 기업 대상으로, 90% 이상의 기업이 이 구간에 포함됨. 1~3단계의 소득 10만불(약 1억1천만원) 이하 기업에만 15~2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4~8단계 세율도 34~35%로 거의 차이가 없는 실정.

## 4. 검토의견 및 시사점

### □ 증세 부작용은 법인세가 가장 큼(OECD)<sup>4)</sup>

○ 법인세 증세는 ‘근로자·소비자에게 상당부분 전가’ (예산정책처, 2016)

- 법인세는 기업주(owner)가 부담하는 인세(人稅)가 아니라, 수많은 근로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기업(법인)이 부담하는 세금

○ 법인세 인상은 기업투자유지 여건 악화를 통해 근로자, 주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

- 기업 해외이전 증가, 근로자 임금인상 감소·저하, 고용 축소 불가피

• 법인세 1%p 인상시 GDP가 첫해에 0.21%p 감소, 장기적으로는 1.13%p 감소 효과(조세재정연구원, 2015), 고용이 0.3~0.5%p 감소 및 근로자 임금도 0.3~0.6%p 하락(美경제조사국)하는 것으로 분석

- 文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결국 서민·근로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담 지우는 ‘국민증세’에 해당

○ 세계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편

- 나라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 유지가 필수

4) 2017 OECD 세계경제전망보고서.



□ 중장기적으로 세율인하, 누진구조 단순화·단일화 바람직

○ 법인세율 인상 및 누진구간 확대는 매우 잘못된 정치적 오판

-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및 단일세율 트렌드에 역행

- 특히 수출비중에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주요 거래대상국들에서의 경쟁적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 향후 OECD 회원국 평균수준(22.5%) 이하로의 최고세율 인하와 더불어, 선진국들과 같이 누진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일화를 추진할 필요

## II. 중국경제 新위기설의 확산 및 정책 제언<sup>5)</sup>

작성: 윤승현 객원연구위원 ☎ 02-6288-0549

최근 중국경제 新위기설은 중국당국의 주식외환시장 개입이 실패하면서 정부의 경제통제능력 한계를 보임에 따라 세계적으로 확산 중. 특히 부채급증, 외환위기 가능성과 부동산 버블에 대한 중국의 시장통제 어려움, 정치와 경제 결탁 부패구조 등, 중국 금융감독기관과 수뇌부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회색 코뿔소’의 실수를 저질렀음을 자인. 우리는 한국에 만연된 중국경제 낙관 분위기를 가다듬고 특히 중국發 경제위기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임.

### 1. 新위기설의 등장 배경 및 논점

○ 배경: 미국 무디스의 중국 신용평가등급 절하

- 美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Corporation)가 중국 신용평가등급을 28년 만에 처음으로 한단계 강등(2017.5)시킨 후 중국경제 위기설 확산
- 특히 중국 주식시장 붕괴와 외환시장 불안을 통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이해 집합적이고 경직된 정치체제가 경제개혁 부진의 근본원인이란 주장이 제기

5) 김기수, “중국경제 위기설의 새로운 국면”, <세종정책브리핑>, No.2017-30(2017. 12.4)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 ○ 논점

- 중국의 2014~2015년 주식 및 외환시장 혼란으로 대규모 자본의 해외 이탈이 처음 가시화된 후, 중국정부의 경제통제능력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조롱경제론’이 붕괴된 모습을 보임

※ 조롱경제론(鳥籠經濟論)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초기인 1982년 제12차 공산당대회에서 당시 최고 경제전문가 陳雲이 주장. 곧, 시장경제를 받아들인다 해도 새가 새장에 갇혀 있으면 새를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듯이 공산당 권력을 통해 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

## 2. 중국경제 新위기론의 핵심내용

### □ 위기론의 확산 과정

#### ○ ‘회색 코뿔소’의 등장

- 세계정책연구소(World Policy Institute) 대표 미셸 부커(Michele Wucker)가 2013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회색 코뿔소’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최근 중국경제 분석도구로 활용

※ 회색 코뿔소(Gray Rhinos) :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협요인, 곧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무시하다가 통제 불능의 위협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

- 中 인민일보(17.7.17), 중국금융의 위험성이 예상 가능한데도 방치한 것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면서 중국경제의 위태로운 현실을 지적한 후 중국경제 위기론이 다시 부상
- 中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17.7.19), 중국당국이 기관지를 통해 현실을 인정했다는 점은 대단히 이례적이며, 결국 중국 금융감독기관 및 수뇌부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함으로써 당국이 ‘회색 코뿔소’ 실수를 저질렀음
- 美 뉴욕타임즈(17.7.23)-월스트리트저널(17.7.25), ‘회색 코뿔소’ 논리를 활용하여 중국경제의 위험성을 집중 보도하면서 논쟁은 세계적으로 확산

## □ ‘회색 코뿔소’의 실체

### ○ 부채 급증

- 지난 10년 동안 급속히 늘어난 부채는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
- (中정부 통계) 중국의 총 부채는 2008년 GDP 대비 156%에서 2016년 268%로 증가
- 맥쿼리(Macquarie, 호주계 투자은행), 2015년에 중국 부채는 이미 350%
- 블룸버그 통신, 2017년 5월 기준 부채비율이 304%라고 진단

- 중국의 부채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

- 2005년 중국 자본의 한계효율은 거의 100% 수준 → 현재는 25%로 낮아진 점이 가장 중요, 이는 2005년의 경우 100을 투자하면 GDP 역시 100만큼 늘어났지만 지금은 GDP가 단지 25만 증가한다는 의미
- 과거와 비슷한 성장률이 유지되려면 과거 대비 거의 4배의 자본이 투자돼야 하므로, 기업에게 상응하는 수준의 자본 대출을 통해 방대한 투자수요를 메울 수밖에 없음
- 결국 중국정부의 고성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부채 증가의 핵심이유, 그럼에도 고성장을 통해 공산당 독재정치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성장의 중단과 그로 인한 실업 증가 상황이 최대의 정치위기가 될 수 있어 저성장을 감내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

○ 시장통제의 어려움 : 외환위기 가능성과 부동산 버블

- 계속 늘어나는 과도한 부채 및 고갈 위험이 있는 외환보유고의 취약성으로 중국 또한 과거 동아시아와 같은 외환위기에 노출 가능성 상존(Asia's Unhappy Anniversary. Jul 10, 2017 Barry Eichengreen)
- 최근 중국의 행보가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거품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월스트리트저널, 17.7.25)
- 과거 일본이 늘어나는 외환보유고를 활용 무분별한 해외자산 쇼핑을 했고, 그 결과 실속없는 트로피 자산(trophy asset)을 많이 취득했듯이 현재 중국 역시 같은 경로를 밟고 있음

- 역대 중국정부는 부동산을 경제발전의 핵심수단으로 활용, 그러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의 결과 개인 부실대출비율의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거품 붕괴와 은행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중국의 현 부동산 버블 역시 붕괴 직전의 일본경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이어짐(예일대학 교수 천즈우, 매일경제신문 “中 3개 버블 중 주택 가장 먼저 붕괴될 것,” 16.10.13)

○ 정치와 경제의 결탁 부패구조

- 중국식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가 정치와 경제의 결탁 부패구조를 형성하고 그 결과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중국의 현실
- 이에 따라 정치체제의 변화 없는 경제개혁 기대는 무리라는 주장이 새로운 위기설의 또 다른 축으로 등장

[Martin Wolf, “Too big, too Leninist: A China crisis is a matter of time,” Financial Times, 16.12.13]

- 중국식 정실자본주의는 덩샤오핑식 권위주의 경제현대화 모델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제어장치가 없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정치 엘리트들은 경제발전의 산물인 富를 가로채는 데 유용한 권력을 절제하지 못했음. 결국 중국의 부패는 공산당 일당체제와 시장 간 혼인의 자손인 셈
- 레닌식 일당독재 국가는 법을 통해 국민을 지배하면서도 그 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곧 “당이 法위에 존재하는 독특한 체제”이므로 계약의 자유나 법치주의와 같은 시장경제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
- 레닌식 원칙의 복원과 시장 자유화를 조화시키려는 시진핑의 노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인되면 경제는 물론 중국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

### 3. 정책적 제언

#### □ 한국 국내의 중국경제 낙관 분위기 가다듬을 필요

- 중국경제 위기설에 대해 한국 국내에서는 아직 잘 수용되지 않고 있음
  - 중국 공산당이 중국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만성적인 부채 중독을 치유할 수 있다는 낙관론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로 결국 중국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현재 팽팽한 ‘치킨게임’ 양상
  - 또한 최근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정치·경제 마찰현상은 중국경제 전체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 이의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중국경제의 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 서구에서는 중국경제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금융 당국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고 또 올해 8월 IMF도 처음으로 중국경제의 위험성을 지적(IMF, “China’ s Economic Outlook in Six Charts,” <IMF Country Focus>, 15 August, 2017)

#### □ 중국 경제위기의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는 작업 시급

- 중국경제를 정확히 모니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을 통해 과도한 對中 경제의존의 위험성을 한국도 절감

- 이에 따라 수출 및 투자 다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對중 의존을 줄이는 노력 가시화 필요

○ 시진핑 2기 정책에 대비한 중국정부의 향후 대외정책 및 경제정책 파악 중요

- 중국의 정책 분석·평가와 함께 2기 지도부의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당대회를 비롯해 중국 정치·경제시스템의 깊은 이해 필요

□ 黨차원에서는 한·미·일 의원외교 강화 및 대화채널 확보 필요

○ 한·미·일 ‘黨대黨’ 의원외교 활성화

○ 특히, 당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對중국 정치·경제 모니터 특별위원회’의 당내 설치 검토